투데이 칼럼

민주당의 전북자치도지사 12시간 제명이 남긴 것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단 12시간 만에 결정하면서, 전북 민심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당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인물이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정치 무대에서 사실상 퇴장당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의미를 던진다. 핵심은 '징계의 정당성'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발단은 금품 제공 의혹이었다. 반주를 곁들인 식사 이후 청년 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이 전달됐다는 진정과 고발장이 접수됐고, 당 지도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다음 전개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오전 감찰 지시, 밤 최고위원회 소집, 그리고 약 30분 만의 만장일치 제명.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과정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물론 공직자의 금품 제공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의 '속도'와 '수위'다. 당의 징계 체계에서 제명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절차적 검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2시간 만에 내려진 결론은,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의 기억과 겹쳐 본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던 도지사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지역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유력 인사가 배제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전북의 선택권이 또다시 무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금품수수나 기부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출마를 이어가는 사례가 존재한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의혹 제기 직후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은 지역 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계파 구도를 지목한다. 해당 인사가 당내 주류와 거리가 있는 '비주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차기 권력 구도와 맞물린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사실에 가깝다면, 전북은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모되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오랜 기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자리해 왔다. 상당한 규모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자, 선거 때마다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온 '텃밭'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텃밭이 아니라 방치된 땅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변함없는 지지가 오히려 '어차피 지지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낳았고, 그 결과 지역 민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전북의 주요 자리가 거래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지역민의 자존감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역의 대표를 뽑는 문제마저 중앙 정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면, 이는 유권자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 위에 서 있다.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는지,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한 숙고를 거쳤는지가 모두 유권자의 선택권과 직결된다. 이번처럼 짧은 시간 안에 유력 후보가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거는 선택의 장이 아니라 당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 민심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정치적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실제로 "투표로 보여주겠다"는 반응은 그동안의 일방적 지지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황을 단순한 일회성 논란으로 치부한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성찰이다. 왜 이 같은 결정이 지역에 상처로 받아들여졌는지, 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유권자의 선택과 존중 위에 서야 할 하나의 정치 공동체다. 이번 사태는 묻고 있다. 전북은 과연 존중받는 동반자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이는 정치적 자산인가.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사 설

대한노인회 전북 노인자원봉사자 필수교육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노인자원봉사자 필수교육이 도내 일원에서 실시됐다.

교육은 3월 17일 김제시지회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3월 19일은 전북연합회 소속 봉사단 80명의 노인자원봉사자가 전북연합회 3층 강당에서 필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안내를 시작으로 실시됐다. 이어 활동 일지 작성 등 세부 내용 설명,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태도 등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을 두루 실시했다.

특히 올해 교육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보조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국비 3억7,000만원을 확보해, 105개 봉사단에서 2,100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할 계획이다.

활동 분야는 주거 및 환경 보호, 생활 편의 지원, 안전 지도, 상담 및 안내, 교육 지도, 문화 예술 등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장은경 노인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니 힘든 시국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만큼 노인자원봉사로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경 센터장은 특히 봉사자들에게 "마을과 지역 내 각종 사회문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참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종교계가 지탄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종교계는 본분을 일탈하지 않고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JW)은 1870년대 초 미국의 성서학자 찰스 테이즈 러셀(Charles Taze Russell, 1852~1916)이 조직한 소규모 성서 연구 집단에서 발전했다.

1884년 사업가 윌리엄 등과 함께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Zion's Watch Tower)를 설립하면서 조직된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이다. 다수의 개신교 교파는 이단으로 간주한다.

본부는 1969년부터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으로 옮겼으며 워치 타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시계 전광판이 특징이었다. 브루클린의 알짜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이다. 이전 후 뉴욕주 워릭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 자리하고 있다.

증인 측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은 19세기의 신흥종교가 아니라 서기 1세기까지 존재했던 초기 그리스도교를 회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셀이 죽은 지 15년이 지난 1931년 러셀의 후계자 러더퍼드에 의해 채택된 명칭이다. 전 세계 신도의 수는 약 1천만 명이다. 국내 신자는 11만 명 정도이다.

중앙장로회의 1대 러셀(1879-1916), 2대 러더퍼드(1916-1942), 3대 워치 타워 협회장인 노어(1942-1977) 시기까지 협회장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전자발찌, 감시 넘어 실질적 보호로 나아가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일정 부분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두며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성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해 위치추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사례는 전자발찌 제도가 여전히 '완전장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하거나, 훼손 및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의 전자발찌는 주로 위치추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사후 대응에는 유용하지만,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집착과 보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리 기반 관리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전자발찌 제도를 '감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위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경고와 경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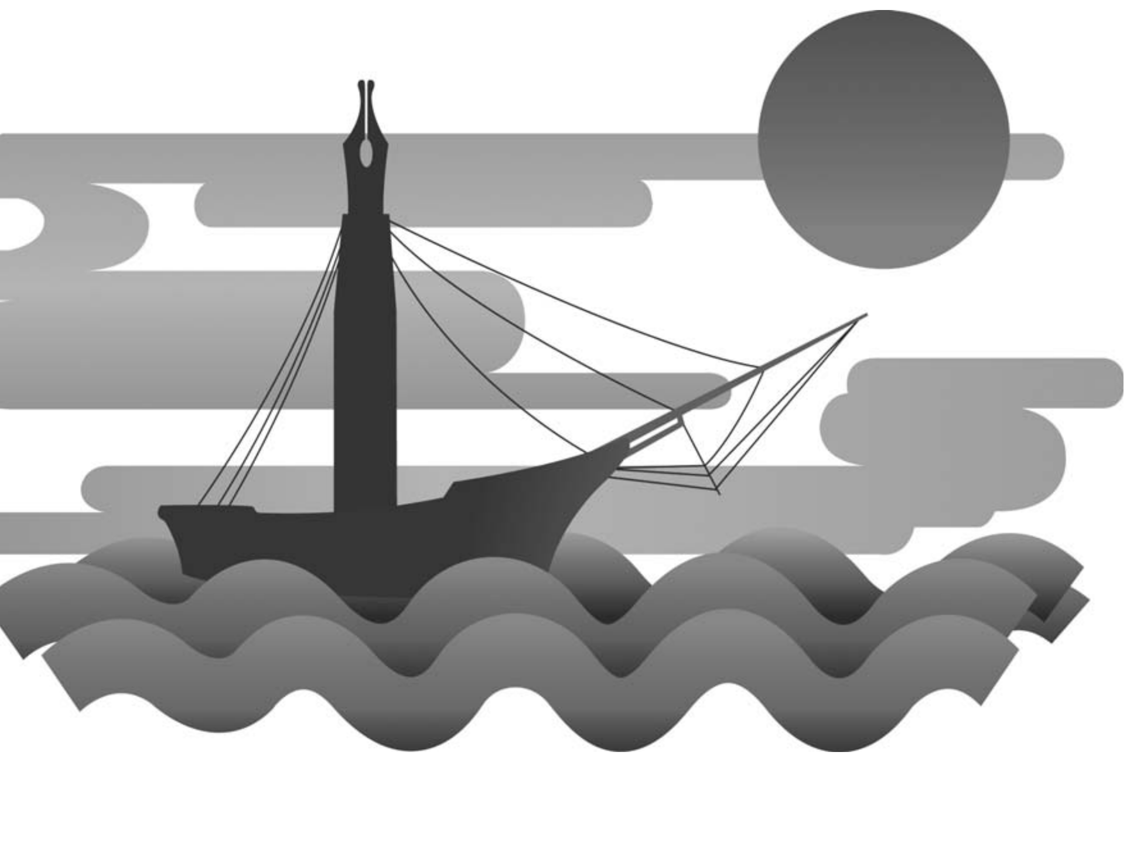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시 강력한 처벌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훼손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긴급 출동 및 신속한 신병 확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피해자에게 위험 알림 장치나 긴급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관리에만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복적인 위협 행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동시에 심료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을 병행하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